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vs 전남 유치전 점화

유적 전남 60개·전북 10개·충남 5개·광주 3개 順
불필요한 지역 내 소모적 경쟁 우려 목소리 많아
“사전 조율 통해 ‘집안싸움’·갈등 차단해야” 지적

광주시에 이어 전남도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가 뛰어들면서 광주와 전남 간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가 각각의 명분을 앞세워 유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불필요한 지역 내 소모적 경쟁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국 마한 관련 유적 78개소 중 80%(전남 60개소, 광주 3개소)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광주와 전남도가 사전 조율을 통해 무의미한 ‘집안싸움’이나 갈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23일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역사문화권을 복원하고 관광자원

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내 후보지는 나주시와 해남군, 영암군 등 3곳이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역사문화유산 연구·홍보를 위한 기관으로 현재 문화재청이 국비 2억원을 들여 건립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건립 대상지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 이래 문헌기록에서 잊힌 마한역사문화가 전남지역에서 6세기까지 독자적 문화를 꽃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바 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종합 정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고, 충청·호남 마한권역에서 가장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센터 건립 최적지라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실제 전남도는 2017년 12월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개발을 위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19년 4월 마한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마한역사문화권 정책 및 국고 지원을 지속 건의한 결과,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

정됐고, 2022년 5월 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포함한 ‘8대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육성’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다.

또한 전남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3억원을 들여 마한 유적지 지표 및 시 발굴조사, 마한문화권 연구총서 발간, 기타 학술대회 등 마한문화 발굴·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한 유적은 78개소가 있다. 전남이 60개소로 가장 많고 전북 10개, 충남 5개, 광주 3개 순이다. 전국 국가사적은 11개소로 이 가운데 7개소가 전남에 소재하고 있다. 또 전남에 있는 비지정 유적은 688개에 이른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전남에 유치해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재 활용 등 컨트를 타워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도 지난 16일 국가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을 가졌다. 광주시는 마한문화유산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실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가 23일 오후 함평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이상의 군수와 지역기관 단장, 주민,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8일부터 5월8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애리 기자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현재, 헌법소송 각하... ‘검수원복’ 시행령엔 변화 없을 듯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형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현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다.

현재가 이날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위 규범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검찰은 지금까지처럼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쌀 초과생산량 정부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輿반대 속 169명 찬성...국힘,尹대통령 거부권 공개 거론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7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농도인 전남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

리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요구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진수·김재정 기자

저수율



Today

- 김경수의 광주명 ‘최초’ 이야기 5면
- 정사로 읽는 전라도 역사 기행 14면
- 김민재 몸값 ‘705억’ 두배 폭등 16면

2023 광주매일신문 연중 공익 캠페인

봉사·나눔·배려로 만드는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광주·전남은 예부터 정(情)이 넘치는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낙후된 경제 여건과 인구절벽 문제가 지역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헤어졌던 이웃 간의 정을 다시 나눠 국난을 극복할 때입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2023년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하고 소개해 온정이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행 기관·기업·단체 :

-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 사랑의열매 · 광주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 ▶ (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 ▶ (사) 광주광역시공두리봉사회
- ▶ 자평(子平) · 남양건설 · 남양문화재단